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5. 6. 30.
No. 1019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심교언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박종화 부연구위원
윤은주 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손재선 부연구위원
홍나은 연구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기업의 ESG 활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

- ① 기업의 ESG 활용은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ESG 성과달성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전략이며,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게 함
- ②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의 재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151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2023년 기준)를 분석함
- 보고서 분석 결과, 지역과 기업 간 협력사업은 130건이었으며, 협력사업의 성과는 도시숲 조성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 복지 20건, 소규모 정비 18건, 나무식재 14건 순으로 나타남
- ③ 기업의 ESG 활용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ESG 보고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함
- (협력체계 미흡)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행정절차 복잡성, 정보 부족 등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이 저하됨
- (ESG 성과인정체계 미흡)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동기 부족
- (중소·중견기업 주도 ESG 경영 실천 한계)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여력과 지원 제도 미흡으로 주도적인 ESG 실천에 어려움
- ④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기업 ESG 연계 민관협력 체계를 도출하고, 기업참여 촉진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함

정책방안

- ① (기업)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서 재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기술개발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사회적 기여효과 등 구체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ESG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함
- ②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연계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발굴하고, 부지 제공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③ (정부)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 대한 ESG 성과를 인정하고 ESG 관련 사업을 윈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와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01.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ESG 활용 필요성

도시의 기후위기와 공공 대응의 한계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도시가 기후행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총회에 참석한 64개국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겠다고 선언

그러나 향후 재원고갈로 인한 정부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는 재정적 제약, 기술적 역량 한계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UNFCCC 2023)

- 지방재정365 지역별·세부 사업별 세출현황(2023년 기준)에서 '기후'와 '탄소'로 검색된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사업 수는 2,037개(기후 629개, 탄소 1,408개)이며, 사업예산은 6,542억 원(기후 2,919억 원, 탄소 3,623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지자체 총사업예산 549조 원 중 0.12% 차지
- 기후, 탄소 관련 사업으로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 '탄소저감 조림',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탄소중립 건물 조성', '폭염저감시설' 등이 있음

기후위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ESG 경영의 중요성 대두

최근 불평등, 기후변화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C40 기후행동계획 프레임워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업은 기후대응의 우선순위가 낮은 경향이 있어 자발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C40 Cities 2020)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2020년에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을 투자이사결정 핵심 이슈로 선언하면서 ESG 투자기준을 발표하였고, 이에 기업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ESG 경영이 불가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투자의 의사결정 및 장기적·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인 ESG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 국제적으로도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 법제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산업통상자원부 2024), 우리나라는 국제적 ESG 흐름에 대응하고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함(ESG IMPACT)
- EU는 ESG 공시 의무화('26~'28년), 탄소국경제도('26년 1월 1일), 공급망 실사 지침('27년 7월) 등 ESG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2026년부터 상장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예정
- 국내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 발표('21년 12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22년 12월),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출범('23년 2월) 등 ESG 대응정책을 마련 중

도시의 기후위기에서 민관협력 대응 부족과 기업 ESG 활용 필요성

민관협력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악화와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도시숲 조성, 그린리모델링 등 도시의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정부, 기업, 시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민관협력사업에서 지자체는 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지만, 민간기업은 참여를 통해 얻는 직접적인 이익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민관협력사업은 대부분 공공성에 기반하므로 여력이 충분한 일부 기업으로 제한되거나, 참여하더라도 높은 민간 자원의존도로 인해 본래 의도가 약화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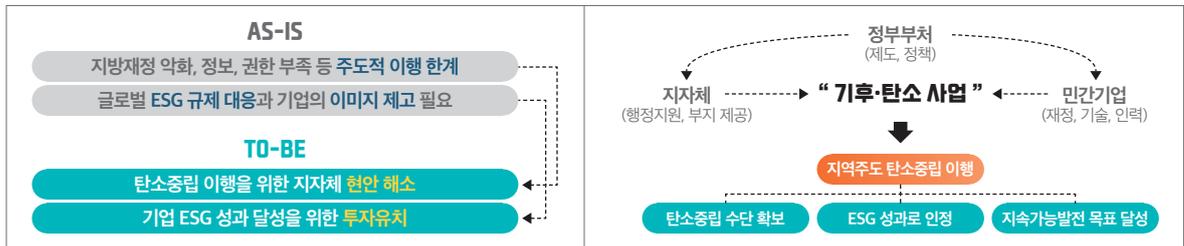
그렇지만 ESG 성과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면서,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필수적인 ESG 성과달성전략으로 고려하기 시작

- 기업은 도시녹지 조성,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구축, 쿨루프 사업 등 도시공간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공헌을 달성하는 동시에 ESG를 실천 중이며, 이러한 사업들은 지자체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기도 함

기업이 ESG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며, 이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사업과 부합하므로 기업 ESG 경영 기조는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회임

- 기업의 ESG 전략과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도시공간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에 ESG 전략이 연결될 때 양측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
- 지자체는 부족한 자원 해소를 통해 주도적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고 기업은 ESG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1 기업 ESG 활용의 필요성(좌)과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통한 민관협력의 목적(우)



02. 기업 ESG 활용을 위한 여건 검토와 쟁점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ESG 경영촉진을 위한 법·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지자체·기업·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책적 여건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 제55조) 국가와 지자체는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해야 하고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 제5조)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환경·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함

(ESG 경영 지원)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¹⁾하여 ESG 경영을 이행하는 자치법규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공공,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기본계획 수립, 중점관리 목표, 인센티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유인책이 도입되었으나 선언적 수준으로 한계가 존재

(성과인정 및 그린워싱 방지) 기업의 ESG 활동을 촉진하고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ESG 연계,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보호를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함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ESG 경영 지원’으로 검색한 결과, ESG 조례는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교육청을 포함하여 총 83개로 조사됨.

151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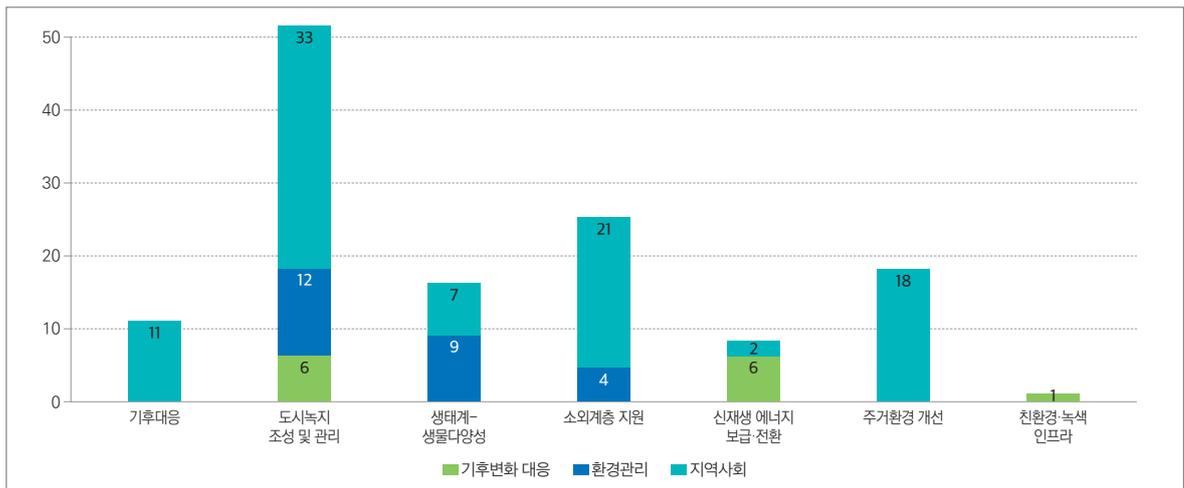
한국거래소(KRX) ESG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업지배구조공시 우수기업 161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3년 공시 기준) 중에서 중복 보고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관련 성과가 없는 보고서를 제외한 후 151개 보고서를 조사함

- 보고서에 담긴 총 1만 8,695개 성과 중 '기후변화', '환경', '생물다양성', '지역사회', '사회공헌' 키워드가 있는 1,637건의 성과를 선별하였고, 이 중 계획이나 목표 설정만 수행한 경우와 기업만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역사회 협력과 무관한 사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0건(약 0.7%)을 선정함
- 기업의 ESG 전략 중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 있는 환경·사회 부문에서의 성과로 한정하였으며, 거버넌스 관련 성과는 기업경영방식과 관련성이 높아 제외함

지역사회 기여 또는 협력한 기후위기 대응 성과 130건 중 13건이 기후위기 대응 분야(E)였고, 25건은 환경관리(E), 92건은 지역사회(S) 분야로 조사됨

- 기후위기 대응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항목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환, 친환경·녹색인프라,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이 있으며,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생태계-생물다양성,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 소외계층 지원 관련 사업들이 추진됨
- 지역사회공헌 분야에서는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 생태계 복원, 주거환경개선, 기후대응, 소외계층 지원 관련 사업들이 추진됨

그림 2 분야별 중점 활동의 ESG 성과 건수



자료: 151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조사하여 저자 작성.

중점 활동에서 실행 성과는 도시숲 조성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 복지 20건, 소규모 정비 18건, 나무식재 14건 순이었으며, RE100, 생태조성, 봉사활동, 전기차 전환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중점 활동별 실행 성과는 건물 태양광, 태양광, 도시숲 조성, 친환경 전기차 전환 성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도시숲 조성, 숲 가꾸기, 공원 조성, 바다숲 조성, 산림 복구 등임
- 지역사회 공헌 분야에서 중점 활동별 실행 성과는 그린리모델링, 쿨루프, 에너지 복지, 소규모 정비, 나무식재, 도시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ESG 성과는 온실가스 감축, 도시숲 조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할 때 ESG 성과 달성과 지역사회 기여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체로 대기업 위주로 공개하고 있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ESG 실천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표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중점 활동별 실행 성과와 주요 내용

중점 활동	실행 성과	주요 내용	기업명	업종
신재생에너지 보급·전환	RE100	· 시민들의 작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제주 오피스 100%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	카카오	정보통신업
	건물 태양광	· '대구 스마트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 일반 가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2021년: 공주시, 안동시, 예천군, 무주군 / 2022년: 예천군, 의성군, 무주군 / 2023년: 예천군, 의성군)	한화시스템	제조업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	도시공원 조성	· 민관협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삼자 협약을 통해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을 조성) 및 생태계 복원 신기술 개발·확산 추진	현대자동차	제조업
	도시숲 조성	· 2021년부터 한미 녹색숲 조성, 평택시 통북천 인근에 나무 및 희귀식물을 식재, 현재 한미 녹색숲 2호 조성	한미약품	제조업
친환경 녹색 인프라	전기차 전환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차량 10대 기부	하나금융지주	금융 및 보험업
소외계층 지원	에너지 복지	· 서울지역 5대 쪽방촌 지원(주거시설이 열악한 쪽방촌 거주민 지원, 2022년 여름 식수와 음식 지원, 2023년 쪽방촌 공용공간 내 에어컨 사용 전기요금과 생수 지원 예정)	하이트진로	제조업
생태계-생물 다양성	산림복원	· 탄소중립 숲 조성 협약 체결(2022년 동해안 산물로 훼손된 홍천지역의 숲을 복원하기 위해 묘목의 생산 및 식재에 사용될 비용 3억 원을 지원)	고려아연	제조업
기후대응	그린 리모델링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2022년 에너지 빈곤층 세 가구를 대상으로 내부 단열공사, 조명기구 교체, 창호교체 등을 진행하였고, 복지시설 3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도매 및 소매업
	클루프 조성	· 폭염완화 주거지원: 2021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폭염완화 지붕(클루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	세아베스틸지주	제조업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정비	· 새마을마을(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전국 단위 노후주택 환경개선 사업, 2022년 209세대 개선 완료)	케이씨씨	제조업

자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 중 일부 성과만 저자 작성.

ESG 관련 이해관계자 인터뷰

ESG 및 협력사업 관련 기업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비영리 단체 대상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ESG 대응여건', '협력사업 추진배경과 애로사항', '지역사회공헌 활동과 성과인증', '사업참여 유도방안'을 중점적으로 도출

- 인터뷰 결과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여건과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후위기 대응사업에서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연계를 강화하려면, 기업의 참여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성과인정체계와 협력구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자체는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이 필요

- (기업) 기후위기 대응 민간협력사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ESG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와 선도기업의 성공사례, 사업부지 확보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지원도 요구됨
- (지자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지역 내 기후위기 대응사업에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매칭 시스템이 필요함
- (비영리단체) 기업과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성공사례집이 필요하며 규제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ESG 활용을 위한 쟁점 도출

법·제도 검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사·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하여 기업의 ESG 활용에 있어 세 가지 쟁점사항(① 협력체계 미흡, ② ESG 성과인정체계 미흡, ③ 중견·중소기업 주도의 ESG 경영 실천 한계)을 도출함

그림 3 쟁점 사항별 주요 내용 요약

01	협력체계 미흡에 따른 실행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규정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흡함 · 행정절차의 복잡성, 협력사업 관련 정보 부족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저하시킴
02	민관협력에 대한 ESG 성과인정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성과를 ESG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 미흡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와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한정 · 일부 기업의 과장된 환경적 성과 홍보를 방지하도록 성과인정체계가 필요
03	중견·중소기업 주도의 ESG 경영 실천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재정적 부담이 높은 중견·중소기업은 관심도가 낮은 상황 ·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따라 협력업체의 부담은 늘었으나, 중견·중소기업의 준비 부족과 지원제도 미흡으로 주도적인 ESG 실천에 어려움

03. 기업 ESG 활용을 위한 사례분석

기업 ESG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협력체계 미흡, ESG 성과인정체계의 부족,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ESG 경영 실천 한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

(인정제 마련) 부산 ‘기부숲 온실가스 감축기여 인증제’는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서 탄소배출 감축 등 구체적 환경성과를 평가·보상할 수 있는 ESG 성과인정제가 필요함을 보여줌

- ESG 성과인정제를 통해 기업의 기부활동이 단순 자선활동을 넘어 환경적·사회적 기여로 인정되면 기업은 ESG 성과를 달성하고, 지자체는 기부숲 확보를 통해 도시 내 녹지공간 확대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행정절차 간소화 및 통합지원) Net-zero Europe Platform 사례는 ESG 실행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협력사업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자금 조달 및 실질적 정보제공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시사함

- 이 플랫폼은 유럽연합의 공동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회원국 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자금 조달, 투자자 매칭 지원,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단일연락창구’, ‘허가절차 기간단축’ 등을 통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특징으로 함

(협력모델 구축) 가나의 탄소시장 프레임워크는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탄소 크레디트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의 필요성을 보여줌

- 공공성이 짙은 사업에서 기업이 탄소배출 감소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해당 성과에 따른 탄소배출권 제공이나 사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ESG 성과 활용 강화) 런던의 도시숲 조성계획은 공공조달 과정을 통해 ESG 성과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확립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함

- Greater London Authority(GLA)는 책임 있는 조달정책(Responsible Procurement Policy)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한 성과를 공공조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음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적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이 ESG 성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

04. 기업 ESG를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기업의 ESG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적

(기본방향) 첫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둘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셋째, 상호 합의된 목표를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협력을 수행해야 함

- 지자체의 요구사항과 기업이 투입할 수 있는 자원과 기대 이익이 명확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된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기업 ESG 활용 목적)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현안 해결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ESG 성과를 달성하며 양측의 목표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기업 ESG 연계 민관협력체계 마련

(필요성)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 주도 정책과 민간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로,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ESG 경영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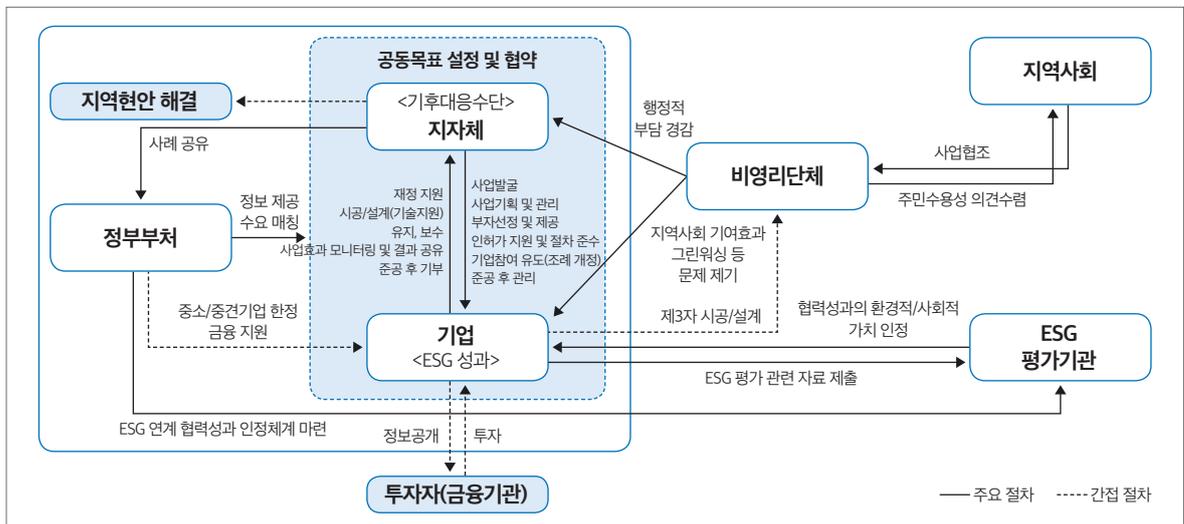
(원칙) 기후-탄소 관련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ESG를 연계한 민관협력체계의 주요 원칙을 제시함

- 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ESG 성과를 명확히 하고,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② ESG 연계 민관협력체계는 양측의 요구를 충족하고 이를 보장, ③ 사업진행 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뢰를 구축

(협력체계 제시) 협력체계는 지자체와 기업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

- 지자체는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주도하며 부지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기업은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자로서 재원을 투입
- 정부는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ESG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협력체계의 성공을 촉진함

그림 4 ESG 연계 민관협력체계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ESG 기반 민관협력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협력체계'를 중심 구조로 두고, 이를 지원하는 'ESG 성과인정체계', 'ESG 인정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협력지원 플랫폼'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협력체계 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제안함

(ESG 성과인정체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기업)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후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정량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ESG 성과인정체계를 공식화함
- (정부) 기업의 ESG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성과인정체계를 활성화함
- (지자체) 국가 단위의 성과인정체계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발굴·운영하고, 기존 인증 시스템(예: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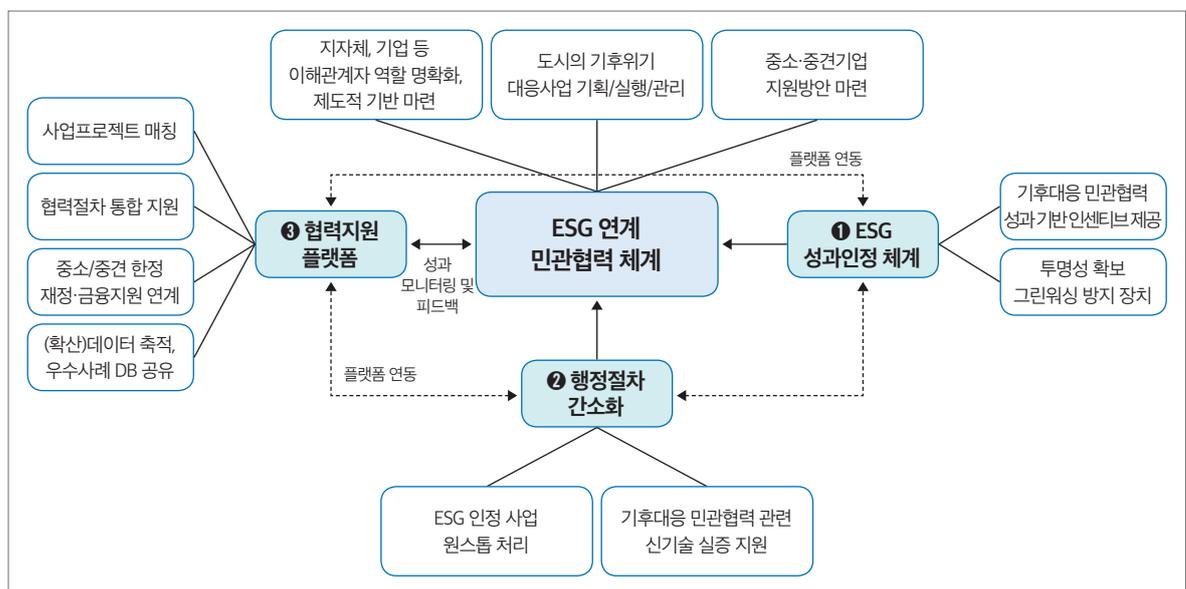
(행정절차 간소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윈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협력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강화함

- (기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의 인증부터 실증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윈스톱 인허가 시스템과 플랫폼에 연동시켜 효율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함
- (정부)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ESG 활동을 연계하는 방법론을 구축하고, 인정된 성과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사업 실행력을 높임

(협력지원 플랫폼) 프로젝트 정보, 성과 검증 등을 제공하여 수요가 맞는 지자체와 기업 간 매칭·협력을 촉진함

- (기업·지자체) 협력지원 플랫폼의 매칭, 계약,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기업은 ESG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 ESG 사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 DB를 구축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정부) 해당 플랫폼에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기능을 제공하여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협업의 투명성을 높임

그림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 ESG 기반 추진전략의 상호관계도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2024. 범법법인 세종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2024년 전망’ 리포트: “2024년 해외 ESG 공시 의무화 동향 주목해야”. 통상 2월호 vol.141. https://tongsangnews.kr/webzine/1512402/sub5_1.html (2025년 6월 26일 검색).

ESG IMPACT. ESG 국내정책. <https://esgimpact.co.kr/main/content/view/MN01030000.do> (2025년 6월 26일 검색).

C40 Cities. 2020. Climate Action Planning Framework. <https://c40.my.salesforce.com/sfc/p/#36000001Enhza/1Q0000001mw6/Dn5yZGRzu3uSpVrzflmuJOgU1tqq4jpFIEDfJnTGUM> (2025년 6월 26일 검색).

UNFCCC. 2021. The Republic of Korea’s Enhanced Update of its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NDC/2022-06/211223_The%20Republic%20of%20Korea%27s%20Enhanced%20Update%20of%20its%20First%20Nationally%20Determined%20Contribution_211227_editorial%20change.pdf (2025년 6월 26일 검색).

- **박종화**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jh.park@krihs.re.kr, 044-960-0301)
- **윤은주**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yoonej@krihs.re.kr, 044-960-0219)
- **신서경**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jsshin@krihs.re.kr, 044-960-0327)
- **손재선**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jsson@krihs.re.kr, 044-960-0418)
- **홍나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nehong@krihs.re.kr, 044-960-0252)

※ 이 브리프는 “박종화, 윤은주, 신서경, 손재선, 홍나은. 2024.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연구: 기업의 ESG 활용을 중심으로. 세종: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